

전국민이 행복한 삶의 터전별 공약





우리집



☑ 내 집 마련을 위한 튼튼한 주거 사다리를 놓겠습니다.

- 전국 총 311만호의 주택(기존 정부 발표 206만호+105만호 추가)을 신속히 공급
 - 기본주택 140만호 공급
 - 기본주택(임대형)은 저렴한 임대료·고품질·장기간 거주 주택으로 80만호 공급
 - 기본주택(분양형)은 부담능력과 선호에 따른 다양한 선택 기회 부여를 위해 누구나집형*, 건물분양형, 지분적립형, 이익공유형**, 공공분양형으로 60만호 공급
 - * 사전 확정된 분양가로 임대 종료 후 매입, ** 매각시 지분에 따라 이익 공유
 - 택지공급가격기준 변경(감정가격→조성원가), 분양가상한제 민간 적용, 분양원가 공개 확대하여 인근 시세의 절반 정도인 '반값 아파트' 대량 공급
 - 신규 공급물량의 30%는 무주택 청년에게 우선 배정
 - 용산공원 인근 주택 10만호는 전량 청년기본주택으로 공급

☑ 재개발·재건축, 신속히 제대로 하겠습니다.

- 신속협약제 도입과 인허가 통합심의를 통해 사업기간 대폭 단축
-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합리적 개선
- 공공재개발 시 용적률 상향 등 추가 인센티브 부여, 공공기여 비율 탄력적 조정
- 고도제한지역, 1종 일반주거지역에 생활형 사회간접자본 등 맞춤형 지원대책 마련
- 재정착이 어려운 원주민을 위한 특별 대책 강화

☑ 부동산 공시가격제도 개선으로 국민부담이 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.

-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는 계획대로 추진하되 과세 부담 완화
- 부동산 공시가격을 활용하는 항목에 대한 제도 개선

☑ 종합부동산세로 인한 역불합이 없도록 개선하겠습니다.

- 이직, 취학 등 일시적 2주택자이지만 중부세가 부과된 사례 구제
- 상속지분으로 다주택자가 되어, 중부세가 부과된 사례 구제
- 투기 목적이 아닌 중증 명의 가택, 전통 보전 고택, 협동조합형 사회주택, 농어촌주택이나 고향집 등에 대한 중부세 중과사례 구제
- 1주택 장기보유 저소득층과 노인가구 중부세 납부 연기

☑ 주거취약계층 사회주택과 중산층 공동체주택 보급을 확대하겠습니다.

- 주거취약계층 수요를 반영한 사회주택 등 공익적 민간임대주택 공급 확대 지원
- 공동체의 가치를 증진할 수 있는 중산층 주거의 새로운 모델인 공동체주택의 확산을 위한 지원 강화
- 혼인 외 독립·동거·비혼·이혼·미혼출산 등에 따른 다양한 주택수요 포괄하도록 주거정책 개편
- 인가구 주택수요를 반영한 공유형 기본주택 등 공공주택 공급 확대

학 교



☑ 대학등록금과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겠습니다.

- 사교육 경감 위한 맞춤형 지원 확대 및 교육 플랫폼 구축
- 사교육 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 개선
- 대학등록금 부담완화

☑ 유아교육·돌봄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로 부모님 걱정을 덜어드리겠습니다.

- 유아 및 보육의 단계적 통합 추진
- 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돌봄 컨트롤타워 신설
- 초등학교 오후 3시 동시하교제 도입, 초등돌봄교실 저녁 7시까지 확대

☑ 안전하고 획기적인 공간 혁신으로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.

- 기본학력 보장을 위해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학급당 학생수 20명 목표 단계적 추진
- 미래교육, 학생친화형 공간 혁신을 위한 '그린스마트미래학교' 사업 확대
- 지역사회와 협력한 학교복합시설 확대

☑ 세계를 선도하는 학문 강국을 실현하겠습니다.

- 한국형 대학원 공유체제로 대학원 연구 역량 강화
- 기초학문 분야 집중 투자
- 대학의 국제화 지원
- 학문의 균형발전과 안정적인 학술연구 평가·관리 체제 구축

국 회



☑ 국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,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겠습니다.

- 국회의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견제장치 강화
- 대통령과 여야 대표와의 여·야·정 협의체 상설화 추진

☑ 특권 대신 일하는 국회,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국회를 만들겠습니다.

-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의원 징계심사 신속처리
-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추진 및 무노동 무임금법 도입
- 국민이 보다 쉽게 법률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보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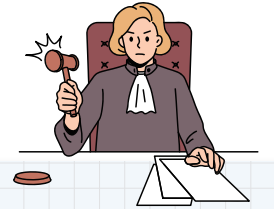
☑ 미래를 이끄는 청년들의 정치참여와 도전을 지원하겠습니다.

- 각급 선거 최초 출마 만 34세 이하 청년후보자의 기탁금 폐지 등 청년 후보자들의 도전 장벽 제거 추진
- 청년후보자의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 선거비용 보전기준 하향조정
- 정당의 청년 후보자 추천을 촉진할 수 있도록 청년추천보조금제 도입
- 성별·지역을 고려한 청년 공천 의무비율제 도입
- 청년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청년정책 담당 수석비서관·청년 특임장관 신설
- 각 부처 청년예산에 실질적인 '총액배분 자율편성' 보장, 국민참여예산에 청년참여예산 쿼터제 적용,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·조정 기능 강화
- 청년참여단 개편으로 '청년의회' 상설화

☑ 대전환 핵심 의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습니다.

- 공론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대전환 핵심 의제 논의 추진
-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사회적 대화기구의 결정 실질화 제고

법 원



☑ 국민 중심의 재판서비스를 만들겠습니다.

-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'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' 실질화
- 사법절차의 신속성과 투명성 제고 및 국민의 사법 편의성 강화
- 취약계층의 재판청구권 보장을 위해 인지대 등 소송비용 경감방안 마련

☑ 국민참여재판을 확대하겠습니다.

- 형사사건의 국민참여재판 개선
- 형사사건 이외의 재판(징벌적 손해배상, 집단소송)에 대해서도 국민참여재판 적용 추진
- 국민참여재판 전담재판부를 구성하는 한편, 재판부의 과중한 업무 부담 해소 위해 인적·물적 지원을 확대
-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무죄 판결 시 검사 측 항소 제한

☑ 수요자 중심의 '원스탑 법률조력'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.

- 국가와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대국민 법률지원 서비스를 연계·통합하고 서민들에 대한 소송구조를 강화
- 수사단계부터 국선변호인의 조력 제공
- 국선변호 서비스 개선



경찰·소방서

☑ 우리 사회 영웅, 국가가 지켜드리겠습니다.

- 소방·경찰 등 제복입은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부상이나 질병으로 장애를 입은 경우 공무와 질병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공상추정제도 도입 추진

☑ 경찰의 민주적 통제와 분권을 강화하여 경찰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.

- 국가경찰위원회를 경찰에 대한 실질적 통제기구로서의 권한과 역할 강화
- 국가경찰위원회 산하에 독립된 '경찰청장후보추천위원회' 구성
- 자치경찰제 위상과 역할 강화
- 국가수사본부의 수사 및 인사·예산의 독립성 강화

☑ 경찰·소방 책무에 상응하도록 처우와 보수를 개선하겠습니다.

- 경찰, 소방, 해경 직군을 공안직 보수체계 편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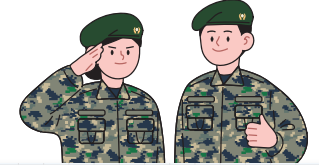
☑ 국민안전 제고를 위한 최고의 소방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.

- 4차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보다 스마트한 현장 대응
- 안전약자에 특화된 소방서비스 제공

☑ 소방관의 건강과 복지를 국가가 더 책임지겠습니다.

- 소방사무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국가와 지방의 공동사무로 규정
- 소방관 직무스트레스 및 정신질환 예방·관리를 위한 힐링센터 설치
- 코로나 19등으로 출동이 많은 119구급대 4조 2교대제 도입으로 119구급서비스 제고

군 대



☑ 군장병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.

- 병사월급을 최저임금 수준인 200만원 이상 지급
- 병사 통신요금할인 비율을 20%에서 50%로 인상 확대
- 군복무 중 대학 취득학점 확대 및 학점인정제 참여 대학 확대를 통해 '최소 1학기 군에서 이수'가 가능하도록 제도화, 취업/창업 지원 프로그램 확대
- e-book 포인트 지급 및 태블릿PC 사용 허용

☑ 장병 복무여건을 개선하고 군 인권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.

- 2030세대의 특성에 맞는 생활밀착형 및 공감형 복무여건 현대화 추진
- 군대 성폭력 근절 대책 마련 및 장병 인권 보호

☑ 정예강군 육성을 위해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하겠습니다.

- 국민개병제 하에 '징집병'과 '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' 중에서 택일하는 선택적 모병제 도입
- 부사관 우수인력 확보 및 안정적인 충원을 위해 과감한 인센티브 부여
- 징집병 감축 및 복무기간 단축
- 학군장교 의무복무기간을 현행 28개월에서 24개월로 단축

☑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.

- 군 복무 중 다친 의무복무자에 대한 보상기준 완화, 상이등급 미달자 지원제도 추진,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에 대한 기준 개선
- 군복무 중 부상을 당한 의무복무자에 대한 정부·지방정부 청년지원 사업 우대
- 성폭력 피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 강화
- 군복무 호봉인정 의무화

☑ 4차 산업혁명 시대 첨단과학기술을 적용하여 스마트강군을 건설하겠습니다.

- 국방예산 효율화
- 무기체계 첨단화 추진
- 스마트 강군을 위한 대통령직속 민·관·군 국방혁신기구 설치

☑ 북핵 및 WMD 대응 억제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.

- 핵위기 시 협의절차 구체화 등 확장억제 신뢰성 제고 추진
- 북핵 등 다양한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독자적인 첨단 억제전력 강화

☑ 우주시대를 선도하는 국방 우주전력을 확보하겠습니다.

- 대통령직속 국가우주산업전략본부와 연계하여 국방 우주전력 강화 추진
- 국가 우주방위를 전담할 우주사령부 창설 추진



정류장



☑ 전국을 하나의 생활권으로, 통합교통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.

- 도시내 출퇴근 30분대, 메가시티내 1시간대, 전국 2시간대 대중교통 이동 보장
- 막힘이 없는 전국 대중교통 통합연계교통망 구축
- 남북철도 연결사업을 통해 유라시아 대륙철도 확장 기반 마련

☑ 누구나 이동이 자유로운 교통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.

- 교통약자의 교통기본권, 최저교통서비스 기준 등 마련
- 광역버스 등 생활대중교통수단에 대한 지원 확대
- 대중교통취약지역에 버스와 택시를 결합한 콜 기반 대중교통수단 대폭 확대
- 장애인·어르신·임산부 등의 안전한 이동을 위한 장애물 없는 교통시설과 교통수단 확대, (전기)저상버스 도입 대폭 확대

☑ '안전한 미래로(路)' 나아가겠습니다.

- 빅데이터, AI기반 교통안전 서비스체계 구축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50% 감소 추진
- 어린이 중심의 교통안전 교육시설 확대 및 국가책임 강화
- 이륜차 관리체계 구축 및 보험료 체계 개선 추진
- 자동차사고 과실산정, 보험·정비업체 투명성 제고로 운전자 보험료 부담 완화 추진

☑ 보행자가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교통환경을 만들겠습니다.

- 음주시동 잠금장치 의무화 및 상습 음주운전자 음주치료 의무화
- 습관적 과속(기준속도 초과 40km이상 / 연3회) 및 난폭·보복운전자에 대해서 운전면허 취소기준 강화 및 재취득 금지기간 확대
- 이륜자동차 전면번호판 부착 의무화 및 소음단속 강화
- 교통약자 보호구역 범위 확대 및 보호구역 내 감시카메라, 과속방지시설, 도로반사경 등 안전시설 확충
-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 법제도 정비

방송국



☑ 품격있는 콘텐츠 제작·공급을 위한 외주제작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.

- 방송사업자와 제작자(사)간 공정 거래 질서 확립
- 건전한 중소 제작사 지원 확대

☑ 시청자인 국민 중심의 방송을 위한 법·제도를 개선하고 지원하겠습니다.

- 방송의 보도·제작·편성의 자율성 확보
- 시청자 권익 확대
- 라디오방송 서비스 환경 혁신

☑ 미디어 생태계 변화에 따른 방송광고 등의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.

- 지상파방송 광고제도 재정비
-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한 관련 법 개정

☑ 지역·중소방송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.

- 기금을 통한 프로그램 제작 지원
- 정부광고 중 방송광고부문의 지역·중소방송사 지원
- 결합판매 방송사 및 광고주에 대한 혜택 부여
- 방송의 지역성 구현 지원 강화

병 원



☑ 각 지역별로 공공병원을 충분히 확보하여 감염병 대응역량을 높이고, 필수요료를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.

- 중앙 감염병 전문병원 조속한 설립 추진 및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추가 설립
- 지역에 우수한 공공병원을 신·증축하여 지역간 의료격차 해소
- 공공의료 역할 수행하는 민간병원에 대한 재정적·정책적 지원 확대

☑ 꼭 필요한 공공·필수·지역 의료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겠습니다.

- 공공·필수 의료 분야의 인력 양성을 위해 국립보건의료전문대학원 설립
- 의대 정원 합리적 증원 및 내실있는 운영을 통해 의학교육 질 향상과 환자안전 강화
- 필수 진료 분야에 대한 지원을 통해 국가 책임을 강화
- 지역의사제, 지역간호사제 도입으로 지역·공공·필수 의료인력 대폭 확충
- 전 국민의 보편적 건강 보장을 위한 간호법 제정 추진
- 전공의 수련 환경 및 의료인력 처우 획기적 개선

☑ 간병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 하겠습니다.

- 간호·간병통합서비스 시행 의료기관 확대 및 10만 병상 확보
- 요양병원 확대 시행을 위한 요양병원 간호·간병통합서비스 적용 모델 정립
- 지역별 참여병원 지정·할당을 통해 간호·간병통합서비스 지역격차 해소
- 간병인력 양성제도 수립 및 간호·간병인력 처우개선
- 교육전담간호사제와 교대근무방식의 개선을 통한 간호 환경 대폭 개선
- 불필요한 입원, 사회적 입원 등 방지대책 병행 추진

☑ 전국민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여 국민 모두가 차별 없는 건강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.

- 전국민 주치의 제도 도입 추진
- 아동 및 장애인 치과 주치의 제도 전면 확대로 구강건강 향상
- 적정수준의 수가체계를 마련하여 동네병원 활성화와 환자부담 최소화
- 치아 임플란트, 탈모 치료, 아동청소년 중증아토피 치료 등 건강보험 적용 확대

☑ 보험재정 악화시키고 대리수술과 과잉진료 일삼는 불법 사무장 병원을 완전히 척결하겠습니다.

- 건강보험공단에 불법사무장병원 단속을 위한 특별사법경찰권 부여
- 자진신고와 내부고발자에 대한 면책 및 신고 포상 강화
- 불법개설자에 대한 처벌 및 부당이득 환수 강화

대상별 공약

